

민주, 전대서 권리당원 비중 강화·병립형 비례 검토

지도부, 내년 총선 적용 당헌당규 개정안 당무위 통과 "병립형 회귀시 총선 의석수 싸움에서 유리" 내부 진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강성당원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차기 전당대회 규칙과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도부가 전당대회 권리당원 비중 강화안을 밀어붙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다.

두 방안 모두 비명(비이재명)계 등 비주류가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이다.

비주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당권 독식을 위한 '선택적 혁신'에 나섰다 비판하고 있어 내용이 재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비중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권리당원 60표는 대의원 1표에 해당해 이 안건이 다음 달 7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되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

전대에서 권리당원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간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여기다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전대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까지 내놨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이고, 강성당원인 '개팔'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양측이 이 문제로 충돌하자 당내에서는 내년 8월이나 있을 차기 전대 물의를 미리 건드려 계파 갈등을 들추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비중 문제는 일단 잠복했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도부가 석 달간 잠잠했던 이 이슈를 공식 회의 테이블에 올려 일사천리로 추진하자 비주류는 친명계가 '팬덤'을 등에 업고 차기 지도부까지 차지하려는 포석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조승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뿐 아니라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과 힘이 되는 건 팬덤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쏘아 불었다.

하지만, 지도부는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등가성 조정 문제는 당내 '컨센서스'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선거제 개편 문제에서도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방안이 급부상하자 비주류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지도부 내에서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중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그 부작용인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장치가 없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여당과의 총선 의석수 싸움에서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내부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주류는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선거제도 퇴행에 앞장서는 꼴이 된다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약속한 당과 이 대표의 중연동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이탄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병립형으로 돌려 양당 카르텔을 한다는 것은 거대 재벌들이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원칙과 상식'은 전날 성명에서 "병립형 합의는 정치 야합"이라며 "이재명 지도부가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야합을 나쁘다면 모든 것을 걸고 뜻있는 의원들과 힘을 합쳐 막아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쟁점 예산 줄다리기 협상

소소위 밀실 예산, 총선 앞 선심성 우려...법정시한 초과 관측

여야가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 쟁점 예산들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에 들어갔다.

이러바 '소소위'로 불리는 이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특위위원장과 여야 간 사인 국민의힘 송연석·민주당 강훈식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다.

소소위는 그동안 한정된 특정 인원을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 '밀실 심사', '쪽지예산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올해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예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소소위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예산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다. 그러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져 감액 심사 정도만 진행했을 뿐, 증액 심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은 전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야 간 협의로 넘겨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 이를 처리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강훈식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대통령)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한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쟁점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경우 여야가 서로 총선용 예산 증액을 눈감아주는 '짬짜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여야는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만약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인원이 본회의에 자동부속된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與 당협위원장 중 46명 '컷오프' 권고

당무감사위 "하위 22.5%, 당협 활동 문제...공천배제·재조사 결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하위 22.5%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키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곳 ▲ 당무감사 결과, 22.5%인 46명의 당협위원장의 당협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러한 내용을 이르면 오는 30일 당 최고위에 보고하고,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46개 하위 당협 이외에도 원내 국회의원

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 지지도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문제가 있다고 할지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점수가 나빠도 당협 활동 점수가 좋으면 권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총선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공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하위 46명의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46개 당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제할지, 다시 조사할지는 공관위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 예산 논의 회피하며 국정 발목"

민주 최고위...홍의표 "노란봉투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의표 원내대표는 27일 "야당의 예산·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 다니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정부·여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한 다음 제시해 협의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정권 방안에 '울인'하고,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물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에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 민생법

안과 이동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공포 시한이 집중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국정을 방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은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 방탄이 아닌,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결정과 관련 "부산시민, 국민과 함께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엄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